한미 FTA 영향

농업소득 7조7천억 감소

"쌀, 협상서 제외하고 예외조항 둬야"

한미FTA 체결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3개의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대외정책연구원(KIEP)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 80% 감축을 가정했을 경우 농업소득 감소액을 9천억원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인 곡물과 유지작물 관세가 50% 감축됐을 때 2조3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을 때 8조8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농민단체의 주장과 비슷했다.

이에 대해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쌀을 포함해 분석해야 올바른 협상전략을 짤 수 있음에도 불구, 아예 분석에서 제외한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소득 감소분은 7조6천93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미국은 FTA체결로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미국에서 발표된 로고우스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물,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FTA 체결 4년 후 미국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달러(10조4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 교수는 "미국과 비교해 농업경쟁력이 월등히 열악한 쌀 등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간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하고 또 정부는 농업에 대한 구조개선 및 소득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주요 농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 예외, 관세의 점진적 감축 등 품목별로 민감성과 특수성이 감안된 다양한 양허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전문가들은 ▲민간품목 관세철폐에 대한 신축성 최대한 확보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의제간 득실 조화 ▲농축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마련 ▲농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수립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Safe Guard)=세이프가드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로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수산업 기반 붕괴 위기"

협상안도 마련 안돼…피해규모 들쭉날쭉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분야의 경우 제조업이나 농업부문에 비해 정확한 피해분석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부족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어업인들은 고유가, 선원구인난, 어선 노후화, WTO·DDA 수산보조금 제한우려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된다면 어촌 전체가 붕괴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수산업 피해 분석에 관한 자료는 현재 2개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수산물 수입이 현재보다 10~20% 늘어나며, 예상 피해규모는 511~849억원에 달한다.

어종별로는 그간 높은 수준의 조정 관세로 수입이 억제돼온 명태나 민어 등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명태연육·은대구·먹장어 등은 미국 의존도가 더욱 증가해 수급조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는 "국내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은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대미 수출은 일부 고관세품목을 제외하면 수출증가폭이 낮을 것으로 전망돼 FTA 체결로 인한 수산업 부문의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원양협회는 원양업종별 생산감소액, 선박자산 상실 등에 따른 선원실직 등 고용불안까지 합쳐 5천774억원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7배의 차이가 난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연구위원은 "분석방법과 이용한 자료가 다르겠지만, 양쪽의 예상 피해규모가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그간 연구가 제대로 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국내 수산업의 현실과 미국의 수산시장 정보에 기초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파급영향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산부문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인데도 상품무역에 포함돼 구체적인 협상안조차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협상과정에서 수산물 수입급증시 특별수입제한조치 도입,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및 장기간에 걸친 관세감축 등 협정문 내에서 농업에 버금가는 보호와 기금의 확충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현표 박사는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고 수산물에 대한 각 품목별 영향은 물론 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해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경쟁우위품목은 단기유예, 민간품목은 장기이행기간 부여 ▲가공수산물 수출지원방안 모색 ▲허용가능한 보조금 내에서 직불제 형태의 피해보상 등을 제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열린우리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영등포 당사에서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 일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 직전 자신의 정동영 당시 의장 퇴진 발언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폭풍 정치권 강타

우리당 지도부 와해 격랑속 표류
민주당 정계개편 방식 놓고 이견
한나라 대선주자간 全大 신경전

5·31 지방선거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김혁규, 조배숙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창당 이래 9번째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위 구성에도 당내 계파 및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 및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일단 당내에서는 김근태 최고위원에 비대위원장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당에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김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선 의원인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나 조세형 상임고문 등 중량감 있는 중진들이 위기의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쟁력이 있는 대선 주자가 없는데다 뚜렷하게 당내 주도권을 독점할 계파도 없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민주당도 정계개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고건 전 총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역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보다 유연하고 겸허한 자세로 정계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폐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창조적 파괴에 나서야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계개편을 이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기 고건 전 총리와의 접촉은 물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연쇄적인 접촉을 갖는가 하면 한화갑 대표도 지난 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시기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일 6개월 이전에 후보를 선출하게 된 규정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를 일찍 선정한다면 여당의 정치공세로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측은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당헌·당규를 시행도 하기 전에 바꾸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으며 손학규 경기지사측도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중간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대표 측과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측의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힘 겨루기 등도 가열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거패배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생각"

청와대 노대통령 '선거 인식' 보도 해명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홍보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참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언급이 발언 취지가 그릇되게 전달됐다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행사의 대통령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투영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당일 행사에서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선거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적, 정책적 면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